

# KMI 동향분석

**VOL.86**  
2018 JUNE

발간년월 2018년 6월(통권 제86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감 수 하동우 인포그래픽 김태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협력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 6.13 지방선거 이후, 지역 해양수산 정책대응 필요

최지연 해양수산 지역발전 연구센터 부연구위원  
(jychoi@kmi.re.kr/051-797-4713)

황재희 해양수산 지역발전 연구센터 전문연구원  
(jhwang@kmi.re.kr/051-797-4728)

전현주 해양수산 지역발전 연구센터 연구원  
(hyunjj@kmi.re.kr/051-797-4720)

KMI는 6·13 지방선거에 나선 정당과 11개 시·도지사 후보자의 해양수산 부문 지역정책공약을 조사 분석하였다. 공약 분석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홈페이지(<http://policy.nec.go.kr>)에 등록된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 정의당)의 지방정부 공약집과 시·도지사 후보자 선거공약서 등을 활용하였다.

이번 6·13 지방선거의 해양수산 지역정책 공약의 주요 키워드는 크게 농·어업인의 소득·생활 지원, 지역 해양신산업 육성, 해양관광의 활성화, 남북평화 협력교류 등으로 제시해 볼 수 있다. 정당과 후보자들은 농·어업인의 소득·생활지원을 위해 농·어업인 기본소득 지원, 청년 농·어업인 생활지원에서부터 열악한 섬·연안·어촌지역의 SOC 확충, 농·어촌 관광활성화, 농·수산물 공급처 확대 등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지역 해양신산업 육성 공약은 해양에너지·해수 산업의 활성화, 신해양산업의 클러스터 조성, 해양치유산업 육성, 항만·공항 인프라 조성, 항만과 주변지역 통합 개발, 스마트 양식산업과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등으로 다양하다. 11개 시·도지사 후보자들의 공통 지역공약은 섬·어촌, 크루즈·마리나 등을 활용한 ‘지역 해양관광의 활성화’와 ‘남북교류협력’ 정책이다. 정당과 후보자들은 남북교류협력 정책공약을 서해안(환황해) 평화·경제벨트 조성과 동해안 평화관광벨트 구축 등으로 제시했다.

각 시·도별 해양수산 부문 정책공약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장 후보자는 해양수산·항만·물류의 융·복합을 통해 동북아 해양중심도시로 도약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부산항 중심의 물류허브단지 조성,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인천광역시장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은 인천항 중심의 물류거점 조성, 서해평화협력사업, 인천항만·도시재생사업 등이 주를 이뤘다. 울산광역시장 후보자들은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와 조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

정책공약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경기도지사 후보자들은 경기만 일원의 해양·생태관광 확대와 서해안 평화벨트조성, 평택항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충남도지사 후보자들은 섬, 갯벌, 항만, 머드·소금 등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정책과 안면도 국제관광특구 지정 등을 공통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북도지사 후보자의 정책공약은 새만금 활용에 주안점을 두면서 새만금 신항만의 조성, 신재생에너지 기반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남도지사 후보자들은 해양수산업의 부가가치화 정책과 다도해 등 섬 관광활성화를 위한 항만·공항 등의 인프라 조성 등을 공약하였다. 경남도지사 후보자들은 제조업 기반의 물류산업 전진기지화, 조선해양산업의 글로벌 허브 구축 등 조선·해양산업의 회복을 위한 정책과 남해안권 해양관광벨트 조성 등을 위한 지역공약을 제시했다. 경북도지사 후보자들은 울릉공항, 항만, 철도 등 SOC 사업과 동해안 에너지, 해양자원 등 연구개발 활성화 등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다. 강원도지사 후보자들은 동해접경해역의 평화적 이용, 연어·명태 등 동해 고유 수산자원의 회복, 어업인 지원 등을 위한 정책공약을 제시했고, 제주도지사 후보자들은 한서해경제벨트 구축을 위한 제주형 물류체계, 자연해안 경관관리 강화, 해양·섬 관광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발표한 11개 시·도의 해양수산 부문 지역공약은 지역의 해양수산 발전 잠재역량을 최대한 끌어 올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항만도시, 어촌, 섬 등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기존 지역의 해양수산정책이 개별 해양수산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이었다면, 이번 11개 시·도지사 후보자의 공약은 해양수산 자원을 종합적 지역발전의 핵심 축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이번 시·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안한 해양수산 관련 지역공약들은 단지 해양수산부의 지원만으로 실천 가능한 것 보다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문화관광체육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등 다양한 부처와 관련된 공약들이 많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려는 해양수산 관련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나 예산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각종 정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 6.13 지방선거, 해양수산 부문 지역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공약 제시

### ■ 정당별 해양수산 지역공약은 농·어업인 소득증진과 경제 활성화, 남북교류협력, 해양 사고 안전, 연안지역 SOC, 해양환경·생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

-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해양수산 정책과의 궤를 맞추기 위한 해양수산 전반에 관한 지역 정책공약을 제시하였는데, 최근 이슈화된 해양사고 안전, 남북교류협력, 수산물 안전성, 연안·항포구 등의 정주환경 개선, 고부가가치 양식 산업 지원 등에 관한 정책 공약을 제시함

표 1.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해양수산 관련 주요 정책공약

구분	주요 지역정책공약 내용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항여객선, 낚시어선 및 연근해 어선 등 선종별로 안전대책 추진</li> <li>- 어선 출입항신고, 위치보고, 조업제한, 안전조업을 위한 지원 및 벌칙 등 안전기준 마련</li> <li>- 긴급신고전화 접수기능을 지방해경청으로 통합</li> <li>- 공청시스템 도입·운영</li> </ul>
수산물 관리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 및 단속 강화 및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추진</li> <li>- 분석장비 확충으로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제고</li> </ul>
남북 교류협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차원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지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li> <li>- 남 제주도-북 양강도 등 남북 지자체별 자매 결연 추진: 지자체 차원 상시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토대 마련</li> </ul>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지원 및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T·IoT를 활용한 스마트 육상 양식단지 시범조성</li> <li>- ICT·BT 등 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첨단 양식시스템 현장 보급 확대</li> <li>- 참다랑어, 뱀장어 등 고부가 전략 양식품목 집중 육성</li> <li>- 해상운송 전 과정의 기술혁신을 통한 스마트 해상물류 구현: 자율운항선박, 해상내비게이션, 스마트 항만 등</li> </ul>
연안 및 항포구의 정주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안침식·침수 등 연안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재산 보호</li> <li>- 쾌적하고 안전한 연안을 위한 연안정비사업 확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0년~2029년) 수립 시 연안정비사업 범위 및 규모 확대</li> <li>- 낙후된 소규모 어항·포구 중 선도 투자 대상 300개 선정 및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환경, 이용객 수와 특성 등을 분석·유형화하고 국가사업으로 연차별 개선계획 수립</li> </ul> </li> <li>- 연안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특별관리해역의 방류수기준 강화</li> </ul>
해양환경 위해요소 체계적 관리 및 갯벌 관리·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폐기물법 제정을 통해 해양폐기물의 전 주기적 관리 체계: 발생수거처리-유효활동-모니터링, 해양 쓰레기 관리 종합대책 마련</li> <li>-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훼손오염된 갯벌 생태계 개선을 위한 복원 사업 확대</li> </ul>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자율 휴어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금어기 및 업종 자율 휴어기와 연계한 수산자원 보호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 보호를 위한 휴어제 도입 추진</li> </ul> </li> <li>- 대형선망을 대상으로 법정 금어기 외 휴어기 도입 유도 지원</li> </ul>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지역 상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강안 절책 효용성 검토 및 감사장비 대체를 통한 철책 제거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이 경계작전을 위해 설치한 철책에 대해 군 주도로 철거 시행</li> <li>·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일대 140km 철조망 철거로 지역관광지역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li> </ul> </li> </ul>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홈페이지(<http://policy.nec.go.kr>, 2018. 6. 5. 검색)

-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정당공약을 3대 분야 173개 실천과제로 제시하였고, 해양수산 부문과 직접 관련된 것은 ‘살기 좋은 농산어촌 만들기’에 해당함. 주로 농어업인 소득증진과 생활개선에 관한 것이며, 특히 최근 중국어선 등에 의한 어민피해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응 정책공약으로 외국어선 불법어업 등 피해어민을 위한 보상지원 제도화 등이 포함됨

**표 2. 자유한국당의 지역 해양수산 관련 주요 정책공약**

구분	주요 지역정책공약 내용
농어업재해보험료 국비지원 70%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국가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인상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안전 보장</li> <li>- 재해복구비 현실화를 위해 복구지원 단가 인상</li> <li>- 65세 이상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 국비 지원 추진</li> <li>-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li> </ul>
농어업인 면세유 및 금융 비과세 등 조세지원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수협 3천만원 이하 예탁금 비과세: 농어업인 서민층의 소득 보장</li> <li>- 농·수협 조합원 1천만원 이하 출자배상 비과세 : 농어업인 실익사업 지원</li> </ul>
농어촌 1000원 택시 및 농어촌 교통할인권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버스요금에 준하는 1000원으로 택시 이용</li> <li>- 농어촌 교통 할인권(교통비 할 일원) 지급</li> <li>-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li> </ul>
“함께 한밥상”(농어업인 마을 공동급식)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능직불제 성격의 “함께 한밥상”(농어업인 마을 공동급식 사업) 추진</li> <li>-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법」 개정</li> </ul>
외국어선 불법조업 등 피해어민 국가보상 제도화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불법어업 활동 벌금 상향(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li> <li>- 외국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을 위한 지원 제도화 추진</li> <li>- 접경지역 어업인 수산직불금 지급</li> <li>- 인공어장, 어촌회관, 치어방류 사업 등 지원</li> <li>-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과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li> </ul>
도서지역 방문객 여객선 운임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객운임 지원으로 방문객(관광객) 여객선 운임할인</li> <li>- 육상의 버스운송 체제와 같이 바다 항로에 대해서도 준공영제 도입</li> <li>-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해운법」 개정</li> </ul>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을 중심으로 부동산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li> </ul>
폐교 활용 제고로 지역사회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도심과 농산어촌 지역의 폐교 활용 캠핑장(야영장)과 귀농·어촌 지원시설 추가</li> </ul>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홈페이지(<http://policy.nec.go.kr>, 2018. 6. 5. 검색)

- 바른미래당의 해양수산 관련 지역정책공약은 농어업인 기본소득 지원과 농어촌의 지역경제 활성화, 불법조업 등에 대한 대응강화 등으로 제시됨. 특히 농어업인 기본소득 지원은 바른미래당 만의 공약으로 생태환경 보전 농어업을 하는 소규모의 오지·전통마을을 대상으로 농어업인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원하여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표 3. 바른미래당의 지역 해양수산 관련 주요 정책공약

구분	주요 지역정책공약 내용
농어업인 기본 소득 지원제 및 월급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다움 유지마을 기본소득 지원 제도 도입</li> <li>· 생태환경보전 농어업을 하는 소규모의 오지·전통마을을 대상으로 저소득 농어업인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원하여 농어촌다움의 유지 강화</li> <li>- 수확물 담보형 농어업인 월급제 도입: 농수협 등이 농어업인의 수확물(수매대금)을 담보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월급으로 지급, 정부는 농·수협에 이자 비용 지원</li> <li>-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기준소득월액금액(91만원 →105만원)</li> </ul>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자생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민박 등 농어촌관광 활성화</li> <li>· 농어촌민박·체험마을·관광농원 등과 신규 형태의 농가맛집, 테마마을 등을 포함하는 제도 정비 및 지원 강화</li> <li>· 「농어촌 민박 등 농어촌관광 활성화 촉진법」 제정</li> <li>- 시·군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지원 및 ‘고향세’ 도입을 통한 자치 농정 실현</li> <li>· 출신 고향 지자체에 일정한도 범위 내에서 기부를 하면 세제감면과 지역특산물 등을 제공하는 고향 발전기부금(일명 고향세) 제도 도입</li> <li>- ‘1시·도 1농어업·관광 융복합형 테마파크’ 조성 지원</li> </ul>
농수산물 소비처 및 안전·안심 농식품 공급확대로 농어업 소득 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작물 작황정보 관리 시스템’ 및 ‘농산물 적정소득보장제’ 도입</li> <li>- 안전·안심 소비여건 조성 등 우수 농수산물(국산) 사용 촉진</li> <li>· 식재료 및 한식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정비</li> <li>· 외식·식품기업 등을 대상으로 ‘친농어업기업 인증제’ 도입</li> <li>· HACCP 인증 농식품의 단체급식 사용 확대 및 G/LMO 원료 완전 표시제 강화</li> <li>- 미래 농어업과 식품산업 성장기반 강화</li> <li>· 스마트팜, 푸드테크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제도를 개선하고, 창업 플랫폼인 ‘푸드테크 창업 비즈니스센터’ 구축 지원</li> </ul>
중국어선 긴급피난 시 불법조업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어선의 긴급피난을 악용한 수산자원 남획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 강화</li> <li>·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li> <li>· 긴급피난 중국어선 관리 강화를 위해 긴급피난해역 지정</li> <li>· 긴급피난 시 조업활동 금지 규정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마련</li> </ul>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홈페이지(<http://policy.nec.go.kr>, 2018. 6. 5. 검색)

- 민주평화당의 해양수산 관련 정책공약은 연안·도서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항·항만 등 SOC 건설 사업과 남북평화협력, 농어업인 지원으로 제시됨. 이 당의 정책공약 중 도서 지역주민의 생활개선과 관광활성화 등을 위한 ‘흑산공항’ 건설 등 해상교통 대중화 정책공약, 새만금 미래산업도시 구축 등이 특징적임

**표 4. 민주평화당의 지역 해양수산 관련 주요 정책공약**

구분	주요 지역정책공약 내용
지역균형발전: 열악한 호남 SOC에 획기적인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흑산공항 건설</li> <li>- 전북 새만금 복합문화벨트 건설</li> <li>- 새만금 공항과 항만 확대 조기 건설</li> </ul>
농어업·수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어·귀촌 청년 농어업인에게 기본생활자금 지원</li> <li>- 해조류산업육성지원법률 제정을 통한 해조류산업 육성(마른김 생산업자 어업인 포함 지원)</li> </ul>
남북 평화관광벨트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강산 관광재개 및 강원-접경지역의 관광지를 평화관광벨트로 조성</li> <li>- 서해 한강하구 등에 평화생태공원 설치</li> </ul>
전북 호남권 지역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만금 미래산업도시 구축(4차 첨단산업, 물류유통, 신재생, 식품산업 4축으로 새만금 개발)</li> </ul>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흑산공항 계획기간 내 준공 및 국내공항과 연계</li> <li>- 국립 '섬 발전 연구원' 설립으로 해양관광 자원화</li> <li>- 해상교통 대중화를 위한 지원 강화(해상교통 공영제 도입, 해상운송 및 유도선 사업의 인허가권 지자체 이양, 관광활성화 지원 등)</li> </ul>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홈페이지(<http://policy.nec.go.kr>, 2018. 6. 5. 검색)

- 정의당의 해양수산 관련 정책공약은 생태복원과 남북평화 관련 해양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우선 새만금과 관련하여 수질관리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서해5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주민지원 강화, 통일관광 특별지대 등을 제안하였음. 특히 해양수산 남북협력정책공약으로는 서해5도에 북방한계선(NLL) 해상파시 등 남북수산경협 추진과 동해에 '평화의 바다공원' 등이 제시됨

**표 5. 정의당의 지역 해양수산 관련 주요 정책공약**

구분	주요 지역정책공약 내용
난개발 지역의 생태 복원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만금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새만금지역의 수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토지이용 계획 수립</li> <li>· 조력 발전 등 환경친화적이면서 관광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역경제 대안 마련</li> </ul>
서해 5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주민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해 5도 주민이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해5도지원특별법」 개정</li> <li>- 서해 5도 어로한계선 확대 및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보상 제도 마련</li> <li>- 서해 5도 주민의 생명과 생존을 위한 안보정책 개발, 주민대피시설 확충</li> <li>- 북방한계선(NLL) 해상파시 등 남북 수산경협 사업 추진</li> </ul>
통일관광 특별지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 금강산 관광 국제화, 원산의 현대화 등을 포함하는 '동해안 관광특구 계획'을 남북관계 발전 및 강원도 지역관광 활성화와 연계 추진</li> <li>- 동해에 '평화의 바다공원' 및 남북 공동 조업 구역 설치</li> </ul>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홈페이지(<http://policy.nec.go.kr>, 2018. 6. 5. 검색)



## 부산, 해양·수산·항만·물류 융·복합을 통해 해양중심도시로 성장

### ■ 부산이 해양·수산·항만·물류분야에서 세계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공약 발표

- 부산광역시장 후보자들은 부산을 ‘동북아 해양수도’와 ‘부산해양특별시’로 명명하고, 부산항 중심의 물류허브 설치와 북항 일원 통합개발, 해양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과 체류형 해양관광 확대 및 국제크루즈 관광산업 육성 등에 관한 공약을 발표함
- 항만 등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공약과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해사전문법원 설치,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수산물류 교역산업 육성 등을 위한 부산-나진 환동해 프로젝트 등도 공약함

표 6. 부산 해양수산 관련 주요 정책공약

구분	주요 정책공약 내용
더불어 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라시아 관문 미래형 물류허브단지 조성</li> <li>- 북항 일원 통합 재개발을 통한 신해양산업 중심지 조성</li> <li>- 국가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씨푸드밸리) 구축</li> <li>- 체류형 해양관광 및 친수가치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성장동력 기반 일자리 창출</li> <li>- 동삼혁신지구 신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li> <li>- 북항재개발 부지를 중심으로 동삼-센텀-문현혁신지구와 연계한 혁신클러스터 구축</li> </ul>
자유 한국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li> <li>- 신해양 경제클러스터 구축</li> <li>- 동북아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li> <li>- 해사전문법원 설치</li> <li>- 부산항만공사 지방공사화</li> <li>- 국제크루즈/해양관광 중심도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항일원 통합개발 및 북항 재개발</li> <li>- 부산항 메가포트(Mega-Port) 조성</li> <li>-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li> <li>- 고부가 크루즈산업 육성</li> <li>- 스마트 복합물류 항만조성</li> <li>- 부산 극지허브 조성</li> <li>- 환동해 초광역 경제권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린 항만</li> <li>- 부산신항 및 북항 육상전기공급장치(AMP) 설치로 미세먼지 저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형 일자리 창출</li> <li>- 미래 해양산업 육성과 인재풀 형성</li> </ul>
바른 미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나진 환동해 프로젝트(크루즈 산업 육성 및 수산물류 교역산업 육성)</li> <li>- 숨 쉬는 부산, 깨끗한 부산</li> <li>- 해양/항만도시 부산형 미세먼지 저감 장기대책 추진</li> </ul>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홈페이지(<http://policy.nec.go.kr>, 2018. 6. 5. 검색)

## 인천, 인천항 중심 동북아 물류거점과 서해해양평화벨트 제시

### ■ 서해~북한~중국을 잇는 동북아 거점항만 개발, 내항 재개발 등 해양관광도시 공약 제시

- 인천의 해양수산 관련 정책공약은 남북평화협력 구축을 통해 인천항을 중심으로 서해~북한~중국 등 동북아 인접국가의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점항만 개발 사업과 남북공동어로구역, 남북 수산물 해상파시 지원 등 서해평화공원조성이 제시됨
- 국내적으로는 인천내항의 재개발, 골든하버의 추진과 내항 재개발을 통한 해양관광도시 건설 등 원도심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공약을 제시하였고, 도서가 많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백령도 신공항 건설 추진 및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여객선 선착장 설치 등 도서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공약을 제시함

표 7. 인천 해양수산 관련 주요 정책공약

구분	주요 정책공약 내용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강~해주~대동만~백령도~강화도를 연결하는 한반도 해양평화공원 조성</li> <li>- 남북공동어로구역, 해상파시를 조성하여 북방한계선(NLL)을 평화의 바다로</li> <li>- 백령도~중국간 항로개설, 백령공항 건설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종~신도~강화~개성~해주를 잇는 서해남북평화도로 건설</li> <li>- 인천항 동북아 물류거점항만으로 육성(국비 2조원 투입)</li> <li>- 인천내항 재개발, 골든하버 조속추진</li> <li>-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400만 TEU 조기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해평화협력 경제특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도심과 신도시가 어우러지는 재창조 도시, 인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내항재개발 등 거점별 패키지 도시재생 추진</li> </ul>
자유한국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 지구별 맞춤형 해외투자 유치(송도, 영종, 청라)</li> <li>- 송도·남동 미래특화산업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심장, 인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시간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인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와 문화가 있는 국제관광도시, 인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 석탄화력발전 봄철 한시적 셧다운제 도입</li> <li>- 해안 철책처거, 마리나·크루즈 산업 활성화</li> <li>- 해양과 섬, 갯벌 등 생태관광자원화 추진</li> <li>- 내항 재개발로 해양관광도시 건설</li> <li>- 인천 항만배후단지 조기 조성 및 임대료 지원 확대</li> <li>-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유치</li> <li>- 크루즈 및 국제여객부두 건설로 고부가가치 창출</li> <li>- 마리나리조트 조성 추진</li> <li>- 서해 평화협력벨트 조성</li> <li>-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추진</li> <li>- 인천 신항 확대</li> <li>- 아라뱃길 친수공간 조성</li> <li>-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추진</li> <li>- 서해5도 조업구역 확대 및 야간조업</li> <li>- 백령도 신공항 건설</li> <li>- 항포구 보수보강 및 여객선 선착장 설치</li> </ul>
지역특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진군</li> </ul>



정의당	인천~해주~개성을 잇는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	강화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축산어업 육성지원 조례 마련</li> <li>- 내항 재개발로 해양관광도시 건설</li> </ul>
		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li> <li>- 월미도 문화의 거리 워터프론트 조성 사업 조기 추진</li> </ul>
		연수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론트 원안 조기 추진</li> </ul>
		남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래포구 현대화 사업 추진</li> <li>- 남동 에코산업단지 조성</li> </ul>
			원도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과 서해5도를 해양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육성</li> <li>- 서해5도 지원조례 제정</li> <li>- 서해평화공원 조성</li> <li>- 한강하구를 생태·평화·역사 특구로 조성</li> <li>- 인천항을 남북평화와 대중국 교류 거점항만으로 육성</li> </ul>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홈페이지(<http://policy.nec.go.kr>, 2018. 6. 5. 검색)

## 울산, 해양에너지·기술 연구개발 추진과 조선업 활성화 공약

### ■ 해상풍력 발전단지, 해수담수화 사업 등 새로운 에너지 및 신기술을 이용한 해양공간 활용 및 침체된 조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공약 제시

- 울산지역의 해양수산 관련 정책공약은 해수전지 기반 해수담수화(공업용수) 플랜트 사업 추진, 조선 해양플랜트 연구원 설립, 조선해양 ICT 융복합기술 혁신 사업강화, 국립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 설립 등 새로운 기술 및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정책 공약이 제시됨
- 울산대교 전망대~장생포를 연계하는 해상케이블카 설치, 대왕암공원 일원 해상케이블카 설치 및 리조트호텔 건립, 진하 해양레포츠 관광지구 조성 등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공약이 제시됨

표 8. 울산 해양수산 관련 주요 정책공약

구분	주요 정책공약 내용
더불어민주당	- 북방경제협력 중심기지 육성
	- 울산 앞바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 2022년까지 300MW급 발전단지 조성
	- 해수전지 기반 해수담수화(공업용수) 플랜트사업 추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비상하는 울산	-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 설립
	- 울산항, LNG 벙커링 구축
	-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및 맑은물 확보
	- 해상풍력단지 연계 해중체험관 건립
머무르고 싶은 생태·문화·관광 울산	- 울산대교 전망대~장생포 연계 해상케이블카 설치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울산 (에너지 신산업 선도도시)
자유한국당	-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

지역경제의 안정 성장	- 조선해양 ICT 융복합기술 혁신사업 강화 · 차세대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 동북아 오일허브 및 울산신항 개발 가속화 - 대왕암공원 일원 해상케이블카 설치 및 리조트호텔 건립 - 진하 해양레포츠 관광지구 조성
바른미래당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먹거리 준비	- 자동차 조선산업 기반 R&D 클러스터 조성 - 국립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 설립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홈페이지(<http://policy.nec.go.kr>, 2018. 6. 5. 검색)

## 경기, 서해안 평화벨트 조성과 생태·해양관광 활성화 등 공약

### ■ 경기만-한강하구 연계 평화관광벨트, 갯벌·항만 주변지역의 관광활성화 추진

- 경기의 정책공약으로, 생태관광과 섬 관광을 중심으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경기만 마리아나 조성을 통한 해양레저 활성화 방안, 서해안평화벨트 조성 등이 제안됨
- 서해안 평화벨트 조성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서해안평화관광벨트를, 바른미래당은 서해안평화공단을 제시함

표 9. 경기 해양수산 관련 주요 정책공약

구분	주요 정책공약 내용
더불어 민주당	남북협력과 평화 - 경기 서해안 평화관광벨트 조성 지원 - 남북교류사업 -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방안 마련 경기서부권역 시흥 - 갯골생태공원, 호조벌 등 생태관광 활성화 - 제조업 혁신 화성 - 뱃놀이 축제 및 섬 관광 활성화 연구지원 지구 평택 - 평택항 및 배후단지 개발과 주변지 관광산업 육성지원 - 청정해안 유지관리 지원
자유한국당	경기만 마리아나 해양레저 활성화 - 안산-시흥-화성(전곡, 제부, 방아머리, 흘곶) 경기만 마리아나 조성 31개 시군 안산 - 대부도 관광특구 및 에너지 타운 조성 모두 골고루 - 해양안전 체험관 건립 잘사는 경기 평택 - 평택항 동북아 거점항 육성 -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바른미래당	남한의 북한공단 - 경제활성화를 위한 평화벨트 구축(과주-연천-포천-김포-검단-시화-반월 1300만평 대부도 대송단지 등) - 평화공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홈페이지(<http://policy.nec.go.kr>, 2018. 6. 5. 검색)

## 충남, 환황해권 시대를 주도할 해양공간·자원의 활용방안 제시

### ■ 섬, 항만, 해양생태, 머드·소금·수산물 자원 등 기반의 지역 해양 신성장동력 육성 공약

- 충남 해양수산 정책공약은 환황해권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서해안의 섬, 갯벌, 항만 등을 활용한 정책공약이 제안되었고, 공통공약으로는 ‘해양정원’, ‘안면도 해양관광특구’ 등이 제시됨
-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는 가로림만의 국가해양공원 추진, 서천생태도시 추진, 당진항·서산항 확대, 2022 보령해양머드엑스포 개최 지원을 공약하였고, 자유한국당 후보자는 해양정원을 조성을 통한 생태자원 보호·관리·활용의 통합플랫폼 구축, 도서별 테마가 있는 해양관광벨트 조성, 생태계와 해양산업이 상생하는 스마트 어촌정책, 양식수산업의 수산물 수출 지원 등을 공약하였음

표 10. 충남 해양수산 관련 주요 정책공약

구분	주요 정책공약 내용
더불어 민주당	환황해권을 시대를 주도하는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진항·서산항 확대</li> <li>- 안면도 국제해양관광특구 지정 추진 및 개발</li> <li>- 황해도 지역 자매결연과 남북교류협력 조례 개정</li> </ul>
	농축산업이 발전하는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구수산물장 설치</li> </ul>
자유 한국당	지역균형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산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차질 없는 추진</li> <li>- (보령시) 2022 보령해양머드엑스포 개최 지원 대천해수욕장 흑포삼거리-남포 옥동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li> <li>- (태안군) 안면도 ‘국제해양관광특구’ 지정 추진, 이원면 만대~대산 연륙교 건설 지원</li> <li>- (서천군) 서천 생태환경도시 추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진입도로 개설 추진, 농산어촌 순환경제 활성화로 소득 증대</li> </ul>
	환황해 해양벨트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정원 조성을 통해 생태자원 보호·관리·활용의 통합 플랫폼 구축, 관광자원화</li> <li>- 태안 안면도와 보령서천 앞바다 도서별 테마가 있는 해양관광벨트 조성</li> <li>- 머드·소금·해수를 활용한 해양치유관광 집중 육성</li> </ul>
충남 자치 단체	서해안지역 해양관광 전략적 유치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린나항 개발 및 해양레저관광 테마파크 조성</li> <li>- 안면도 등 관광특구 지정 목표</li> <li>-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관광자원화</li> </ul>
	중국·일본 등 아시아관광객 증가에 대한 교통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령신항, 대산항 통해 크루즈관광 유치</li> </ul>
	농수축산의 6차 산업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계와 해양산업이 상생하는 ‘스마트어촌정책’ 적극실현</li> <li>- 해양생태-수산자원-해양문화의 연계통합관리 통해 해양기반산업 적극발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li> <li>- 보령신항, 대산항을 수출전진기지로 육성</li> </ul>
충남 자치 단체	기타 농·축산업 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식수산업(전복, 굴, 김, 해삼 등) 집중육성하여 수산물 수출지원</li> <li>- 어촌발전사업 적극 육성</li> </ul>
	지역균형발전 공약
충남 자치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li> <li>-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자치권 관련 도내 전담 대응팀 구성</li> <li>- 대산 임해산업단지 해수담수화 사업</li> </ul>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홈페이지(<http://policy.nec.go.kr>, 2018. 6. 5. 검색)

## 전북,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시

### ■ 전북의 지역공약은 새만금 신항만 조성·활용과 해양·연안관광 등에 집중

- 새만금의 활용방안에 관한 정책을 항만의 규모화와 스마트 해양관리, 복합물류단지 및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제시하였고, 정의당에서는 새만금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새만금 일대 생태보전 관련 공약을 제시하였고, 조선산업 쇠퇴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저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노동자의 일자리 안정화 방안도 제시함
- 해양·연안어촌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정책공약과 관련하여 고군산군도 명소화를 통한 전라북도 일원의 도서관광 활성화 방안, 어촌지역의 마을관광 및 생태관광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개발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함

표 11. 전북 해양수산 관련 주요 정책공약

구분	주요 정책공약 내용	
더불어 민주당	고르게 발전하는 14개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만금신항만 조기 완공 및 확장</li> <li>- 스마트해양무인 통합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li> <li>- 현대조선소 재가동 추진 및 조선기업 사업 다각화</li> </ul>
	아름다운 산과 들, 강과 바다 수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군산군도 명소화</li> <li>- 농산어촌 마당캠프</li> <li>-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li> </ul>
자유한국당	새만금 무역항 농업용지 무상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만금 무역항 농업용지를 농업인에게 무상 임대하여 환경보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 추진</li> </ul>
민주평화당	대한민국의 새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항만 복합물류단지 조성, 스마트 물류시스템구축</li> <li>- 신재생에너지(조력, 풍력, 태양광) 발전소 및 4차 산업혁명 중심지 조성</li> </ul>
정의당	새만금지속가능 발전협의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민관거버넌스 구성</li> </ul>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협동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만금 용지 일부를 도민주주 공영개발로 추진</li> <li>- 실직노동자(현대중공업/한국GM)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창업 및 일자리 전환지원</li> </ul>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홈페이지(<http://policy.nec.go.kr>, 2018. 6. 5. 검색)

## 전남, 해양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섬의 생활 SOC 확충 등

### ■ 수산·양식, 조선·항만, 해양관광 등 전통 해양수산업의 고도화·첨단화 등을 통한 지역 해양경제 활성화 추진

- 전남지역의 정책공약은 전통 수산·양식업을 스마트화와 수산식품가공업 등과 연계한 정책공약을

비롯하여 다도해(섬), 바다길, 해양 고유자원 등을 연계한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과 흑산공항 등 해양·도서관광 인프라 확충 등 지역 SOC 공약 등을 제시함

표 12. 전남 해양수산 관련 주요 정책공약

구분	주요 정책공약 내용
더불어 민주당	남북화해협력, 서남해안 경제협력벨트 전남 - 통일 농수산협력사업으로 고부가가치 힐링푸드단지 조성 - 한반도 신경제지도(환서해안 경제벨트) 전초기지 조성 - 해양식품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연계를 통해 유라시아로 경제영역 확대
	첨단 신산업 혁신경제 - 광양항 기반시설 확충 및 해양산업클러스터 구축 - 목포해경 제2정비창 유치 및 영암 수리조선 특화산업 조성 - 서남해안 해조류산업 클러스터 및 해양치유단지 조성 - 흑산공항 건설 및 도서지역 연육교 조기 건설
	농수축산 생명산업벨트 - 양식어업의 규모화, 스마트화 양식체제 전환 육성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의 현대화, 수출단지 조성 - 거점별 농수축산단지를 생명산업벨트로 연계
	남겨진 땅 전남, 모든 것이 문화이며 관광입니다. - 세계적 서남해안 휴양관광벨트 구축 · 여수밤바다, 순천만정원, 보성차밭, 지리산과 섬진강을 연계한 명품관광벨트 구축 · 목포, 여수, 고흥, 완도, 진도, 신안, 무안, 영광을 연계한 남해안 해양관광벨트 육성 - 다도해섬의 관광명소화, 해양힐링산업 전략적 육성 - 여수 세계박람회장에 국제규모의 컨벤션센터 건립
바른미래당	동북아 해양수산 관광, 미래산업 - 광양, 목포, 여수 등 물류항의 경쟁력 강화 - 수산식품 및 기자재 산업 활성화 - 다도해 해상복합관광지구 조성: 신안군 흑산면, 자은면 일원 - 국제레저산업 지원 조성 : 목포시 신항만 일원
	해양헬스케어산업 육성 - 전남 해양치유자원의 실용화 - 의료관광 산업과 바이오가 융합된 해양헬스케어 단지 조성
	무안국제공항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 - 흑산공항과 연계노선을 신설하여 급증하는 해양항공 관광수요 대응
	동부권 제2행정청 설치 - 동부권 해양관광 활성화 담당과 신설
민주평화당	돈이 도는 전남 - 농어업 6차산업센터 개설
	관광객 1억명이 오는 전남 - 해양관광도로(고흥, 순천, 광양, 여수~거제) 483km “쫄쫄 노을길” 개발 - 제주해저터널 조기착공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홈페이지(<http://policy.nec.go.kr>, 2018. 6. 5. 검색)

## 경남, 제조업 기반의 스마트 물류허브기지 조성과 남해안 관광 벨트 추진

### ■ 제조업 기반의 물류산업 활성화, 남해안 해양관광벨트 등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

- 경남을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공약으로 스마트 물류단지 및 R&D 센터 설치, 물류 및 조선후방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환경 개선 등도 제안함

- 경남 거제~통영~고성~남해 일대 남해안권 해양관광벨트 조성과 관련하여, 각 당의 후보자는 도보 여행길 등 해양관광휴양벨트, 한반도 SUN-BELT, 해양관광벨트 내 대규모 테마놀이공원 유치 등을 공약하는 등 남해안 일대를 해양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공약함

표 13. 경남 해양수산 관련 주요 정책공약

구분	주요 정책공약 내용
더불어 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기반을 활용한 물류산업 전진기지 구축</li> <li>한반도 평화시대 - 동북아물류 R&amp;D 센터 설치</li> <li>동북아 물류플랫폼 - 융복합 스마트물류단지 조성</li> <li>- 항만서비스 자유구역 지정</li> </ul>
	6차산업의 심장 - 수산식품 6차 산업 거점단지 조성
	힐링관광휴양벨트 - 휴식과 힐링이 있는 남해안 도보여행길 등 남해안권 해양관광휴양벨트
	좋은 일자리 지키기 - 물류 및 조선후방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되찾기
	맞춤형 도시재생 -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 등을 구분한 맞춤형 도시재생 시스템 구축
자유한국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선후방산업 글로벌 허브 구축</li> <li>- LNG 병커링 산업기반 구축사업 가속</li> <li>- 친환경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박 특화</li> <li>- 해양플랜트 모듈산업 클러스터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섬기는 농수축산 정책</li> <li>- 농어업재해 보조지원을 확대</li> <li>- 도지사 직속 민간참여 농수축산위원회 설치</li> <li>- 수산, 양식업 IoT 기반 첨단 복합양식센터 조성</li> <li>- 농수축산 신성장산업(자원, 식품 등) 개발</li> <li>- 귀농/귀어/귀촌 지원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품격 있고 매력적인 관광</li> <li>- 바다 올레길(남해안 코리아 둘레길), 해상서틀 교통망 구축</li> <li>- 남해안 크루즈관광을 위한 전용 인프라 구축</li> <li>- 수면비행선박(위그선)을 활용한 해양관광활성화(통영-미산-부산-울산 동해권과 울릉도-대마도 연결)</li> <li>- 김해-통영-거제로 이어지는 한류웨딩 활성화 지원</li> </ul>
	국제해양 관광거점
	남해안2.0 시대, 한반도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
바른미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해안 해양관광특별권역 지정 및 해양관광 거점 기반 마련(창원-통영-사천-거제-고성-남해-하동)</li> <li>거제 - 조선/해양 글로벌 핵심도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 등)</li> <li>통영 - 한반도 SUN-BELT 중심도시(통영 마리나비즈센터 건설 등)</li> <li>하동 - 여유, 힐링, 세계 속 슬로시티(어촌관광단지 및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li> <li>남해 - 명품섬, 세계 해양관광 도시(남해안 해양관광특별권역 지정 추진)</li> </ul>
	지역균형발전 관광산업 유치
	- 남해안해양관광벨트 조성으로 세계적인 테마파크 디즈니랜드 유치(거제-통영-고성-남해)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홈페이지(<http://policy.nec.go.kr>, 2018. 6. 5. 검색)



# 경북, 해상공항·항만 등 SOC 확충과 해양산업·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 ■ 울릉공항, 크루즈 항만 등 SOC 확충과 동해안 해양에너지·자원 개발 등을 위한 연구 개발 활성화 공약 제시

- 경북의 해양수산 관련 정책공약은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철도·항만·공항 등의 SOC 구축사업과 이를 연계한 동해안 평화관광벨트 명소화, 영일만 전략항 육성 및 환동해경제권 활성화, 국제크루즈 및 마리나시설 확충으로 복합관광거점화 사업 등 평화관광 정책 공약을 제시함
- 동해안의 해양 에너지·자원 등을 활용한 해양에너지벨트 구축과 동북아 해양 융·복합 단지 등 조성하여 새로운 지역 블루이코노미 창출 등에 관한 공약을 제시함

표 14. 경북 해양수산 관련 주요 정책공약

구분	주요 정책공약 내용
더불어민주당	강북 균형발전 (도로·철도·항만·공항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릉공항 조기 건설 추진</li> <li>· ‘북방경제 진진기지’ 거점을 위한 SOC 사업 추진</li> <li>· 포항·강릉·울진-울릉 간 헬기 및 경비행기, 관광헬기 및 위그선 운항</li> </ul>
	동해안 평화관광벨트 명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진, 영덕, 경주, 포항에 이르는 동해안 평화관광벨트 명소화</li> <li>- 경북을 기반으로 북한~중국~일본~러시아를 철도·도로·해상(크루즈) 연계</li> <li>- 국제적 관광상품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li> </ul>
	환동해 첨단과학 기반 에너지, 해양자원 신산업 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항~울진~영덕~경주 중심으로 ‘에너지벨트’ 조성</li> <li>· 동해안 에너지 산업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거점 구축을 위해 해양 자원의 산업화로 신성장 동력 창출</li> </ul>
	블루오션 동해안 발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해선철도, 동해안고속도로, 울릉공항 등 SOC 구축</li> <li>- 동해안권 국제크루즈 및 마리나시설 확충으로 복합관광거점화</li> <li>- 영일만 전략항 육성 및 환동해경제권 활성화</li> <li>- 울릉도·독도 그린아일랜드 조성</li> <li>- 동해안 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육성</li> </ul>
자유한국당	안전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도 영토 주권 강화 및 교육 지원</li> </ul>
	문화·관광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해양자원 연계 레포츠벨트 조성</li> </ul>
	울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북아 중심의 해양융합산업의 전초기지</li> </ul>
	울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적인 해상휴양관광 거점 명품그린아일랜드</li> </ul>
	영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북아 중심의 해양융합관광 거점</li> </ul>
	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의 새로운 관문이자 동북아거점 관문</li> </ul>
성장거점 사업 추	경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촌과 함께하는 글로벌 관광 거점</li> </ul>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홈페이지(<http://policy.nec.go.kr>, 2018. 6. 5. 검색)

## 강원, 금강산·동해안 연계의 평화적 이용, 명태·연어 등 수산자원 회복사업 추진

### ■ 동해 접경해역의 평화적 이용, 명태·연어 등 수산자원 회복사업, 해안관광·레저사업 활성화 등 공약 제시

- 강원지역의 해양수산 관련 정책공약은 크루즈 항로 개척과 공동어로구역 조성 등 해양수산 남북 협력사업을 비롯하여 명태, 연어, 오징어 등 수산양식산업의 발전전략 등을 제시함
- 속초항 크루즈 관광, 산·바다와 연계한 해양관광자원 벨트화, 서핑특화 지구 등 해양레저관광 관련 정책공약 뿐만 아니라 연안침식 대응과 연안어장 생태환경 복원 등 정책공약 등을 제시함

표 15. 강원 해양수산 관련 주요 정책공약

구분	주요 정책공약 내용
더불어 민주당	평화시대를 만들겠습니다 - 백두산 크루즈항로 개척 (속초·목호~원산·나진)
	강원시대를 만들겠습니다 - 남북 공동어로구역 조성
	- 설악~금강~동해안권 관광벨트 조성
	- 동해안 군 경계 철책 전면철거 추진
자유 한국당	각양각색의 산업이 자라나는 강원도 - 동해 수산물 가공산업단지 조성
	더불어 민주당
	불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넘치는 강원도 - 설악~금강~동해안권 관광벨트 조성
	- 동해안 군 경계 철책 전면철거 추진
자유 한국당	땀의 가치가 높아지는 강원도 - 동북아 크루즈관광 거점항 개발
	- 양양 서핑특화지구 조성
	- 명태, 오징어 자원회복 및 양식 산업화(2019년부터 연 100만 마리 이상 방류, 명태양식장 3개소 설치로 양식산업 기반 구축)
	- 연어양식장 지원확대(우량종자 개발, 양식장 확대, 양식산업단지 조성)
지역맞춤프로젝트	- 동해안권 국가어항 개발 계속 추진(속초, 강릉, 고성, 양양): 사천진항과 금진항, 수산항, 거진항, 대포항 등 5대어항을 안전한 관광 휴양 어항으로 개발
	- 남북공동어로구역 조성 : 동해 NLL 기준 20km 이내(저도 어장 포함) 공동어로구역 설정
	- 산악·해양 관광자원 벨트화 사업 및 속초항 크루즈 집안시설 확충
	- 강릉·평창권 4계절 종합휴양관광자원의 벨트화 및 명소화 계획
지역맞춤프로젝트	- 수산식품 수출 가공 클러스터 조성
	- 명태, 연어 등 양식 산업 발전전략 수립 및 추진
	- 환동해 본부 기구 확대 추진
	- 연안방재연구센터 설립
지역맞춤프로젝트	- 갯녹음 발생수역 연안어장생태환경 복원사업
	- 해양심층수 본격적 사업화 추진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홈페이지(<http://policy.nec.go.kr>, 2018. 6. 5. 검색)

## 제주, 해양경제벨트, 해양섬관광, 자연해안 경관관리 등 공약

### ■ 환서해 경제벨트 구축을 위한 제주형 물류체계 구축, 제주 크루즈 활성화, 자연해안 경관 보전 등 다양한 공약 제시

- 제주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공약으로는 제주~수도권~북한~중국까지 연결되는 물류체계 구축과 제주섬 일주 크루즈선 운영 등을 제시하였고, 제주의 해안경관 보전 관리를 위한 사유화 방지공약, 해녀의 특별수당 지급, 해녀문화 관련 사업 등을 제시함

표 16. 제주 해양수산 관련 주요 정책공약

구분		주요 정책공약 내용
더불어 민주당	물류비용 절감과 선진화를 위한 제주형 물류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목포간 고속페리를 통한 '환서해 경제벨트' 연결</li> <li>· 제주~수도권~북한 및 중국까지 물류 라인 확보</li> <li>- 제주해운공사</li> <li>· 「한국해양진흥공사법」 통과 및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과 맞춰 해양수산부 및 해양진흥공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li> </ul>
	경제번영	- 제주도민 '항공료·배값 반값' 추진
자유한국당	1민개 일자리	- 해녀에게 은퇴수당 같은 특별 수당 지원
바른미래당	제주섬 일주 크루즈선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섬 해안선 등을 조망하는 경관상품 개발</li> <li>- 읍면지역 항구를 이용하는 지역균형발전 도모</li> <li>- 도민크루즈선 돌잔치·결혼식 할인혜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어기 조업중단에 따른 운영비 보전을 위한 '휴어기 직불제' 지원</li> <li>- 친환경·명품 '제주광어특구' 지정</li> <li>- 수산물수급 가격안정기금 200억 임기 내 조성</li> <li>- 해녀의 전당, 해녀문화마을, 해녀문화교류사업 지원 확대</li> <li>- 가공용 광어수매 지원, 양식어류 백신공급사업 확대</li> </ul>
	제주 난개발 투자 강력 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안경관 보존을 위한 중산간 보전 가이드라인 발표</li> <li>· 중점 경관관리구역 설정을 통한 경관관리 강화</li> <li>· 제주 환경자원 총량보전 방안</li> </ul>
	제주경관의 체계적 관리 및 환경자원 총량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안변과 중산간의 환경적, 경관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주 해안변 전체와 중산간에 대해 유형별 보전대책 제시</li> <li>· 경관관리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시행</li> <li>· 환경영향평가 심의 강화</li> <li>- 사유화 및 경관훼손 해안변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li> <li>· 사유화 및 경관훼손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처벌 규정 마련</li> </ul>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홈페이지(<http://policy.nec.go.kr>, 2018. 6. 5. 검색)

## 해양수산 지역공약의 주요 시사점

### ■ 해양수산 부문 지역공약, 부문별 산업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종합적 지역발전 축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발표한 11개 사·도의 해양수산 부문 지역공약은 지역의 해양수산 발전 잠재역량을 최대한 끌어 올려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항만도시, 어촌, 섬 등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존 지역의 해양수산정책이 개별 해양수산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였다면, 이번 11개 사·도지사 후보자의 공약은 해양수산 자원을 종합적 지역발전의 핵심 축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 농어업인의 생활지원에서 지역 해양신산업 육성, 해양안전, 해양생태관리, 해양 남북교류 협력 등 다양한 지역발전 공약 제시

- 정당과 후보자들은 농어업인의 소득생활지원을 위해 농어업인 기본소득 지원, 청년 농어업인 생활지원에서부터 열악한 섬·연안·어촌지역의 SOC 확충, 농어촌 관광활성화, 농수산물식품 공급처 확대 등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함
- 지역 해양신성장 육성 정책공약은 해양에너지·해수 산업의 활성화, 신해양산업의 클러스터 조성, 해양치유산업 육성, 항만·공항 인프라 조성, 항만과 주변지역 통합개발, 스마트 양식산업과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등으로 다양함
- 해양안전과 해양생태관리 이슈가 공약으로 등장, 해양관광 증가에 따른 국민안전 수호와 해양환경의 생태적 가치 보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됨
- 11개 사·도지사 후보자들의 공통 지역공약은 섬·어촌, 크루즈마리나 등을 활용한 ‘지역 해양관광의 활성화’와 ‘남북교류협력’정책으로, 정당과 후보자들은 남북교류협력 정책공약을 서해안(환황해) 평화 경제벨트 조성 및 동해안 평화관광벨트 구축 등을 제시함

### ■ 지방정부로 중앙정부 권한의 과감한 이양과 지방정부 정책의 적극적 지원체계 마련

- 지역발전 공약에는 다양한 분야가 종합적으로 반영, 자원의 활용 관련 지방정부와 해양수산부 간 일관된 협업체계 및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문화관광체육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등 정부조직 간 협력이 공약 달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됨

-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려는 해양수산 관련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나 예산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시급할 것으로 보이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각종 정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임

##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간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 TEU 이상 줄어든 듯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업·수산물,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9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6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 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벙커링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린 물고기를 살릴 지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제29호	中 일대일로,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제30호	새 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2017.06.01
제31호	4차산업혁명의 침범! ,로봇·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2017.06.07
제32호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17.06.14
제33호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2017.06.21
제34호	소매 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2017.06.28



구분	제목	발간일
제35호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2017.07.05
제36호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2017.07.12
제37호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2017.07.19
제38호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2017.07.26
제39호	최근 해양 국제기구의 거버넌스 변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2017.07.26
제40호	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2017.08.02
제41호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	2017.08.09
제42호	수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2017.08.16
제43호	신정부, 선박교통관제(VTS) 관리체계 개선 필요	2017.08.23
제44호	바다의 불청객 갯벌이모자반, 다각적인 대응 방안 수립 시급	2017.08.31
제45호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2017.09.12
제46호	한·러 정상회담, 북방경제 협력 기회 - '9 브릿지'를 해양수산세부 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 -	2017.09.13
제47호	갯벌복원 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2017.09.20
제48호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개미 확산 우려, 방역체계 마련 시급	2017.09.20
제49호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	2017.09.29
제50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 지상중계	2017.09.29
제51호	'국민 횡감' 자리매김한 수입 연어, 안정적인 먹거리 차원 관리 필요	2017.10.12
제52호	부산항 터미널 생산성 향상대책 수립 필요	2017.10.23
제53호	대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우선되어야 - 물적,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사전 투자 확대 필요 -	2017.10.27
제54호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시행에 대한 국내 대책 필요	2017.10.27
제55호	국내 해양치유관광 육성 계기 마련	2017.11.01
제56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1.10
제57호	수산업노동제 제도 개선 방향 - 마을공동기금 활성화 등으로 어업인 만족도 높이는 내실화 필요 -	2017.11.15
제58호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되어야	2017.11.22
제59호	북극 과학연구 강화를 위해 제2쇄빙연구선 건조 시급	2017.11.25
제60호	제19차 당 대회를 통해 본 시진핑 2기 중국 해양수산 정책 방향	2017.11.29
제61호	바다의 반도체 김, 수출 1조원 달성 전략	2017.12.06
제62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전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2.13
제63호	골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작은 SOC 사업을 강화해야	2017.12.20
제64호	부산항, 2,000만 TEU 달성 의미와 향후 과제	2017.12.27
제65호	'핵심 키워드'로 본 2017년 글로벌 해양수산	2018.01.03
제66호	빅데이터로 본 2017 해양수산	2018.01.10

구분	제목	발간일
제67호	해양수산물과 국민경제 - '2018 해양수산물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	2018.01.17
제68호	'2017년 KMI 물류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물류 R&D 추진되어야 - 범부처 R&D 추진필요 -	2018.01.24
제69호	바다낚시 정책, 안전·환경·자원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2018.01.31.
제70호	해상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안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 추진 필요	2018.02.07.
제71호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개관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중요 사료의 영문화 작업을 통하여 세계 주요 전문가 대상 홍보 강화해야 -	2018.02.07.
제72호	자율운항선박, 침체된 해운산업 및 조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2018.02.14.
제73호	중국 '북극정책백서' 공식화로 북극 투자 증가할 듯	2018.02.21.
제74호	스마트항만(Smart Port), 전체 물류망을 고려한 로드맵 수립 필요	2018.02.28.
제75호	대형 재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 활용방안 강구 필요	2018.03.09.
제76호	연안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중심 대응방안 마련 시급	2018.03.14.
제77호	바다이용의 대전환,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2018.03.21.
제78호	전국 해양수산물 현안과 정책 공유로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본격적 돌입	2018.03.28.
제79호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의의와 과제 - 해운 정책 지속적 추진 필요 -	2018.04.13.
제80호	국민 92.2%, 미래 국가발전에 해양이 중요하다고 인식: '2018 해양수산물 국민인식조사' 결과	2018.04.20.
제81호	2017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크게 개선	2018.04.30.
제82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위한 대응책 마련 절실... 2028년 종 료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 시급	2018.05.10.
제83호	연안여객 안전 지원을 위해 해상여객안전공단(가칭) 설립 필요	2018.05.16.
제84호	전북 수요 증대를 위해 산지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수익개선 위한 폐사율 저감 혁신 세워야	2018.05.24.
제85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정책 확대해야	2018.05.31.

URL: <http://www.kmi.re.kr/>